의안번호	2205461
의 뢰 인	남인순의원
회 답 일	2024. 12. 19.
추계번호	24D4963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Ⅰ.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인구총괄부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시나리오별로 각각 1,163억 200만원(연평균 232억 6,000만원), 1,726억 600만원(연평균 345억 2,1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평균
시나리오 1 (장관·차관 외 200명 증원, 241명 운용 가정)	23,244	22,634	23,051	23,472	23,902	116,302	23,260
시나리오 2 (장관·차관 외 300명 증원, 341명 운용 가정)	34,496	33,588	34,205	34,838	35,479	172,606	34,521

주 1. 단수 조정에 따른 수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2. 본 추계 결과는 전입인원, 증원인원 및 청사 규모 등에 대한 가정을 바탕으로 유사 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것으로, 향후 실제 전입인원, 증원인원 및 청사 규모 등에 따라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과 다를 수 있음

Ⅱ.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9조(부총리)	-국무총리가 특별히 위임하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둠 ※ (현행) 부총리 2인: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개정안) 부총리 2인: 기획재정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의무규정
2	안 제26조(행정각부) 및 제40조 신설(인구총괄부)	-대통령의 통할하에 두는 행정각부에 인구총괄부를 추가함 -인구총괄부장관은 인구정책의 수립·총괄·조정 및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구조변화 대응에 관한 사무를 관장함	의무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실시 사유)
1	안 제19조(부총리)	-	미대상: 개정안은 현행법에 따른 교육부장관 대신 보건복지부장관을 부총리로 겸임하게 하려는 것으로 이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2	안 제26조(행정각부) 및 제40조 신설(인구총괄부)	○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개정안은 인구총괄부의 신설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현 시점에서 신설되는 조직의 구성·운영 규모를 추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불충분하여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인구총괄부의 정원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직제를 마련하게 되므로 현 시점에서 정원 규모를 예측하기 어려움

○ 임차료의 경우도 인구총괄부의 정원 규모, 위치가 확정된 후 그 규모에 따라 임차나 청사 신축 등의 방식이 정해지므로 현 시점에서 구체적인 비용을 추정하기 어려움

❑ 개정안에 따른 인구총괄부의 업무를 수행 중인 타 부처의 인력은 인구총괄부로 전입된다고 가정하며, 전입 인원에 대한 인건비 등은 기존 예산에서 조정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 대상에서 제외

○ 전입인원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는 현재 중장기적 인구정책의 수립·총괄·조정,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구조변화 대응에 관한 사무를 수행 중인 보건복지부 인력이 9명이라는 자료를 제출[1]하였음

1) 기획재정부와 통계청 등도 저출산·고령사회, 인구구조변화 대응 정책 업무와 관련이 있으나, 법률 및 직제 제·개정 검토 결과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어 현재 기준에서는 특정할 수 없어 자료를 제출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제시하였음([참고 1] 현재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수립·총괄·조정, 인구구조변화 대응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주

○ 최근 정부가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방안, 조직도 등을 참고하여 기획재정부, 통계청 소속 인력 중 인구총괄부의 업무와 관련 있는 인력[2]도 전입인원에 포함하여 전입인원을 총 39명으로 가정

–정부가 최근 발표한 저출생·고령사회 등 인구정책을 총괄하는 부처를 신설하기 위한 정부조직 개편방안에 따르면, 신설 부처는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통계청 등의 인구정책 및 중장기 전략, 인구 관련 통계 분석·연구 기능 등을 이관받을 예정

–정부조직 개편방안에 따르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인구전략기획부장관 소속 자문위원회로 변경됨에 따라 위원회 사무처[3]가 폐지될 예정이나,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4]의 개정이 필요하므로 본 추계에서는 전입인원에 고려하지 않음

❑ 본 추계에서는 전입인원, 유사 조직의 정원 등을 참고하여 다음과 같은 시나리오를 가정하여 추계

○ 시나리오 ① 장관 1명, 차관 1명 외에 200명 규모의 인력 증원이 있는 경우 (전입인원 39명을 포함하여 241명 운용 가정)

○ 시나리오 ② 장관 1명, 차관 1명 외에 300명 규모의 인력 증원이 있는 경우 (전입인원 39명을 포함하여 341명 운용 가정)

– 정부조직 개편방안에서 인구정책 총괄 부처의 유사 사례로 제시한 경제기획원의 정원[5]과 신설 조직임을 고려하여 가정하였으며, 추계기간 중 추가 증원은 고려하지 않음

❑ 시나리오별로 인건비(보수, 기관부담금), 기본경비, 자산취득비를 추계

○ 부단위 조직 중 유사 사례인 중소벤처기업부[6]를 참고하여, 장관 1명, 차관 1명의 정무직공무원의 인건비를 산출

– 장관과 차관의 보수는 2024년도 「공무원 보수규정」 등을 참고

○ 정무직이 아닌 공무원의 각 직급별 보수와 직급별 정원은 중소벤처기업부

요 기능 및 정원 현황)

2) [참고2] 추가 가정에 따른 전입인원 현황

3)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는 3국 11과로 인력은 42명(별도정원 32명, 전문임기제 10명)임 (자료: 행정안전부, 2024.6.30. 기준)

4) 개정안은 남인순의원이 대표발의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459)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5) 경제기획원은 1994년 폐지되었으며, 폐지된 1994년의 정원은 장관 1명, 차관 1명을 포함하여 총 554명임(「경제기획원 직제(대통령령 제14175호)」)

6) 부단위 조직 중 신설 부처와 정원 등이 유사할 것으로 예상되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1명, 차관 1명 외 487명)을 유사 사례로 참고함

의 사례를 준용함

- 2024년 예산에 편성된 직급별 평균 연봉과 직급별 정원 비율[7] 준용

[표 2] 정원 배정안

(단위: 명)

	고위 공무원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시나리오1 (장·차관 외 200명 증원)	7	4	30	71	59	12	7	10
시나리오2 (장·차관 외 300명 증원)	11	6	46	106	89	18	11	13

주: 1. 장관과 차관을 제외한 직원의 정원을 중소벤처기업부 직급별 정원 비율에 맞추어 배분한 것임
2. 단수 조정에 따른 수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공무원 보수상승률, 기관부담금 요율은 국회예산정책처의 전망치를 적용[8][9]

○ 기본경비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인건비 대비 기본경비 비율 준용

○ 기관 신설 이후 사업범위 확대 등으로 인한 사업비의 추가재정소요는 추계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가정

○ 자산취득비는 국회예산정책처 정부부처 1인당 자산취득비 전망[10]을 적용

7) 중소벤처기업부 직급별 정원 현황

(단위: 명, %)

직급	고위 공무원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합계
인원	17	10	74	174	144	29	18	21	487
비중	3.5	2.1	15.2	35.7	29.6	5.9	3.7	4.3	100

주: 3·4급인 경우 3급, 4·5급인 경우 4급으로 합산하고, 전문경력관 나군은 6급, 기록연구사는 9급에 합산함
자료: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바탕으로 정리

8) 공무원임금 평균상승률(2024. 11. 경제전망 기준)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공무원임금 평균상승률	2.5%	1.9%	1.9%	1.9%	1.9%	1.9%	1.9%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9) 공무원 인건비 기관부담금요율 전망(2024.11)

구분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기관부담금	13.00%	13.06%	13.13%	13.19%	13.28%	13.38%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10) 정부기관 1인당 자산취득비 전망(2024.11)

(단위: 천원)

구분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1인당 자산취득비	4,806	4,912	5,020	5,125	5,233	5,343

❑ 인구총괄부의 사무실은 임차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인구총괄부의 적정 면적 및 소재지를 특정할 수 없으므로 면적은 시나리오별 증원규모를 바탕으로 추정하고, 임차료는 전국 평균 임차료를 적용하여 산출

○ 인구총괄부 증원 인원을 고려하여 추정한 전용면적을 전국 기준 오피스빌딩 전용률로 나누어 공급면적을 산출한 후, 공급면적(1㎡)당 임차료를 곱하여 계산

- 전용면적은 「정부청사관리규정 시행규칙」 [별표 1] 청사취득 및 배정면적기준과 기획재정부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청사시설 기준표를 토대로 추정
- 공급면적은 전용면적을 한국부동산원이 「2023년도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에서 보고한 전국 오피스 평균 전용면적비율(57.0%)로 나누어 공급면적(전용면적+공용면적) 산출
- 월 임차료는 한국부동산원이 「2023년도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에서 보고한 평균 임대료 월 17,500원/㎡(오피스 전체 기준) 가정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개정안 부칙과 법안 심사기간 등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인건비(보수 및 기관부담금)

❑ (장관 및 차관의 보수)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에 따른 장관 및 차관의 보수는 다음과 같음

○ 「공무원보수규정」 등에 따라 장관의 보수는 1억 6,237만원, 차관의 보수는 1억 5,470만원으로 추계됨

[표 3] 장관 및 차관 보수

(단위: 천원)

구 분	연봉액	연봉 외 급여				합 계
		소계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가족수당	
장관	145,332	17,040	14,880	1,680	480	162,372
차관	141,143	13,560	11,400	1,680	480	154,703

주 1. 각종 수당 중 가족수당의 경우 배우자 1인만 적용하고, 연가보상비 등은 개인차가 있으므로 제외함
2. 직급보조비는 장관의 경우 월 124만원, 차관의 경우 월 95만원임
자료:「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직원의 보수) 추계의 전제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공무원의 연봉액 및 직급별 구성을 준용하여 추계하면 다음과 같음

○ 추계의 전제에 따라 2024년 중소벤처기업부 예산(본부)에 반영되어 있는 공무원 평균 연봉액을 준용하고, 수당을 합산하여 보수를 산출

[표 4] 직급별 1인당 보수

(단위: 천원)

구 분	연봉액	연봉 외 급여				합 계
		소계	직급 보조비	정액 급식비	가족수당	
고위공무원	124,416	11,160	9,000	1,680	480	135,576
3급	100,104	8,160	6,000	1,680	480	108,264
4급	95,520	6,960	4,800	1,680	480	102,480
5급	72,492	5,160	3,000	1,680	480	77,652
6급	47,976	4,380	2,220	1,680	480	52,356
7급	38,160	4,320	2,160	1,680	480	42,480
8급	32,400	4,260	2,100	1,680	480	36,660
9급	30,936	4,260	2,100	1,680	480	35,196

주: 1. 각종 수당 중 가족수당의 경우 배우자 1인만 적용하고, 연가보상비 등은 개인차가 있으므로 제외함
2. 고위공무원의 직급보조비는 고위공무원 가등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가정함
자료: 2024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예산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보수 총액) 추계의 전제에 따라 시나리오별 증원인원과 1인당 보수를 곱하여 보수 총액을 산출하면, 다음과 같음

○ 연도별 1인당 보수는 직급별 1인당 보수에 공무원임금평균증가율을 적용

하여 산출

[표 5] 보수 총액: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시나리오 1	장관	1명	169	172	175	178	182
	차관	1명	161	164	167	170	173
	고위공무원	7명	985	1,004	1,023	1,043	1,062
	3급	4명	450	458	467	476	485
	4급	30명	3,192	3,253	3,315	3,378	3,442
	5급	71명	5,725	5,834	5,944	6,057	6,172
	6급	59명	3,208	3,268	3,331	3,394	3,458
	7급	12명	529	539	550	560	571
	8급	8명	305	310	316	322	328
	9급	9명	329	335	342	348	355
	합계	202명	15,053	15,337	15,630	15,926	16,228
시나리오 2	장관	1명	169	172	175	178	182
	차관	1명	161	164	167	170	173
	고위공무원	10명	1,408	1,435	1,462	1,490	1,518
	3급	6명	675	687	700	714	727
	4급	46명	4,895	4,988	5,083	5,179	5,278
	5급	107명	8,627	8,791	8,958	9,129	9,302
	6급	89명	4,838	4,930	5,024	5,120	5,217
	7급	18명	794	809	824	840	856
	8급	11명	419	427	435	443	451
	9급	13명	475	484	493	503	512
	합계	302명	22,461	22,887	23,321	23,766	24,216

주: 단수 조정에 따른 수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기관부담금) 기관부담금은 보수 총액에 국회예산정책처가 전망한 연도별 기관부담금요율을 적용

[표 6] 기관부담금: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 계
시나리오 1	1,989	2,041	2,094	2,148	2,204	10,476
시나리오 2	2,967	3,046	3,125	3,206	3,289	15,633

주: 단수 조정에 따른 수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추계 결과, 인구총괄부의 인건비(보수, 기관부담금)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시나리오별로 각각 886억 5,000만원, 1,322억 8,400만원으로 추계

[표 7] 인건비(보수 및 기관부담금):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인건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시나리오 1	보수	15,053	15,337	15,630	15,926	16,228	78,174
	기관부담금	1,989	2,041	2,094	2,148	2,204	10,476
	합계	17,042	17,378	17,724	18,074	18,432	88,650
시나리오 2	보수	22,461	22,887	23,321	23,766	24,216	116,651
	기관부담금	2,967	3,046	3,125	3,206	3,289	15,633
	합계	25,428	25,933	26,446	26,972	27,505	132,284

주: 단수 조정에 따른 수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나. 기본경비

❑ 중소벤처기업부 본부의 2024년 인건비 대비 기본경비 비율 20.3%[11]를 앞서 추정된 인건비 총액에 적용하여 기본경비 산출

❑ 추계 결과, 기본경비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시나리오별로 각각 180억 2,800만원, 269억 100만원으로 추계

11) 2024년 예산에서 중소벤처기업부 본부 기본경비를 본부 인건비로 나누어 산출

[표 8] 기본경비: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 계
시나리오 1	3,466	3,534	3,604	3,676	3,748	18,028
시나리오 2	5,171	5,274	5,378	5,485	5,593	26,901

주: 단수 조정에 따른 수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다. 자산취득비

❑ 증원인원에 대한 PC·사무집기 등 자산취득비는 추계 첫해인 2026년 1인당 502만원으로 가정

○ 국회예산정책처 정부부처 1인당 자산취득비 전망을 활용

❑ 추계 결과, 자산취득비는 2026년에만 발생하며 시나리오별로 각각 10억 1,400만원, 15억 1,600만원으로 추계

[표 9] 자산취득비: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 계
시나리오 1	1,014	–	–	–	–	1,014
시나리오 2	1,516	–	–	–	–	1,516

주: 단수 조정에 따른 수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라. 임차료

❑ 추계기간 동안 인구총괄부의 사무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사무공간 등의 임차료 및 관리비를 추계함

❑ 임차료는 인구총괄부 정원(시나리오1 241명, 시나리오2 341명[12))을 고려하여 추정한 전용면적을 전국 기준 오피스빌딩 전용률로 나누어 공급

12) 시나리오1의 경우 타부처 전입인원이 39명, 장관·차관 등 증원인원이 202명이고, 시나리오2의 경우 타부처 전입인원이 39명, 장관·차관 등 증원인원이 302명임

면적을 산출한 후, 공급면적(1㎡)당 임차료를 곱하여 계산하고, 관리비는 임차료 대비 관리비 비율을 50%로 가정

○ 추계의 전제에 따라 추정한 전용면적을 전국기준 오피스빌딩 전용률(57%)로 나누어 공급면적을 산출

- (전용면적) 시나리오1은 3,117㎡[13], 시나리오 2는 4,308㎡[14]
- (공급면적) 전용면적을 전국 오피스 평균 전용면적비율(57.0%)로 나누어 공급면적(전용면적+공용면적) 산출하면, 시나리오 1은 6,712㎡, 시나리오 2는 8,729㎡

○ 공급면적(1㎡)당 월 임차료(17,500원/㎡)를 곱하여 임차료 산출

❑ 추계결과, 인구총괄부의 임차료 및 관리비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시나리오별로 각각 86억 1,100만원, 119억 6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0] 임차료 및 관리비: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시나리오 1	임차료	1,148	1,148	1,148	1,148	1,148	5,741
	관리비	574	574	574	574	574	2,870
	합계	1,722	1,722	1,722	1,722	1,722	8,611
시나리오 2	임차료	1,587	1,587	1,587	1,587	1,587	7,936
	관리비	794	794	794	794	794	3,970
	합계	2,381	2,381	2,381	2,381	2,381	11,906

주: 단수 조정에 따른 수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마. 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인구총괄부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시나리오별로 각각 1,163억 200만원, 1,726억 600만원으로 추계됨

13) 집무실 2,551㎡, 회의실 및 휴게실 209㎡, 저장시설(문서고, 창고) 357㎡로 구성
14) 집무실 3,535㎡, 회의실 및 휴게실 279㎡, 저장시설(문서고, 창고) 495㎡로 구성

[표 1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 계
시나리오 1	인건비	17,042	17,378	17,724	18,074	18,432	88,650
	기본경비	3,466	3,534	3,605	3,676	3,748	18,028
	자산취득비	1,014	-	-	-	-	1,014
	임차료 및 관리비	1,722	1,722	1,722	1,722	1,722	8,610
	합계	23,244	22,634	23,051	23,472	23,902	116,302
시나리오 2	인건비	25,428	25,933	26,446	26,972	27,505	132,284
	기본경비	5,171	5,274	5,378	5,485	5,593	26,901
	자산취득비	1,516	-	-	-	-	1,516
	임차료 및 관리비	2,381	2,381	2,381	2,381	2,381	11,905
	합 계	34,496	33,588	34,205	34,838	35,479	172,606

주 1. 단수 조정에 따른 수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2. 본 추계 결과는 전입인원, 증원인원 및 청사 규모 등에 대한 가정을 바탕으로 유사 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것으로, 향후 실제 전입인원, 증원인원 및 청사 규모 등에 따라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과 다를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Ⅳ. 부대의견

❑ 본 추계 결과는 전입인원, 증원인원 및 청사 규모 등에 대한 가정을 바탕으로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것으로, 향후 실제 전입인원, 증원인원 및 청사 규모 등에 따라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과 달라질 수 있음

Ⅴ.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지수현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지수현	02-6788-4831	zisu37@nabo.go.kr

[참고 1]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수립·총괄·조정을 수행하는 보건복지부의 주요 기능 및 정원 현황

부처	기구	주요 기능	정원(명)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	•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총괄	9

주: 1. 2024년 6월말 기준
2. 행정안전부는 기획재정부와 통계청도 저출산·고령사회, 인구구조변화 대응 정책 업무와 관련이 있으나, 법률 및 직제 제·개정 검토 결과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어 현재 기준에서는 특정할 수 없어 자료를 제출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제시하였음

자료: 행정안전부

[참고 2] 추가 가정에 따른 전입인원 현황

부처	기구	주요 기능	정원(명)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	•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총괄	9
기획재정부	미래전략국 인구경제과	• 인구정책 총괄, 인구경제연구 및 통계	7
통계청	사회통계국 인구동향과	• 인구 동태에 관한 통계의 작성·분석 • 전국 및 시·도별 장래가구추계통계의 작성·분석 • 사망원인통계 작성·분석	14
	사회통계국 인구추계팀	• 전국·시도별 장래인구 추계 • 국내 및 국제 인구이동통계의 작성·분석 • 시·군·구 장래인구추계 작성에 대한 기술지원	9
합 계			39

주: 정부조직 개편방안, 조직도 등을 바탕으로 가정한 전입인원으로, 개정안 시행 이후 직제 제·개정 협의 결과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